

- 자치구 재원조정비율 상향 -

건의서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자치구 자원조정비율 상향 건의서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님의 관심과 협조에 25만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 대전의 관문이자 대전의 발원지로서 대전 발전의 토대였으며, 서구와 유성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발의 자원 또한 동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지역의 세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전의 발전이 동구의 발전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25만 동구민은 양보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 대전 동구의 인구는 30만을 정점으로 23만까지 감소되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24만을 넘어서는 등 재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만, 재정 자립도는 2010년 현재 12.2%로 낮아지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세원 확보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원도심 동구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 우리 지역은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부족한 자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과 직원 복지 비용 축소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왔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로 구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2010. 3. 31)으로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지만, 자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68%에서 50%로 조정할 경우 자치구의 실질적 세입은 5개구

총 83억원이 증가하나 도시계획세와 등록세의 서구, 유성구 편중 현상으로 원도심 지역인 동구는 54억원, 중구는 25억원, 대덕구는 7억원의 세원이 오히려 감소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지방재정의 악화는 서민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 감소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구와 같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2010년 제1회 추경 기준 자치구의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액은 1,285억원이고 동구의 경우 301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68%에서 50%로 하향할 경우 자치구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지역갈등과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대전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장님께 아래 상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원조정 교부금 비율을 최소한 현행 68%를 유지하여 주시거나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0년도 보통교부금 산정액 수준인 74%로 상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또한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0년 9 월 1 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대전광역시장 귀하